

# 민주 전북 의원 “균형발전 골든타임”

전북 등 3특 특례 확대  
10조 투자 공식 촉구  
“5극 체제 논의서  
뒤로 밀려서는 안돼  
전북 생존 최소 조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4일 국회 소동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3특 특례 확대와 최소 10조원 규모의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시점에 전북이 다시 소외되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이 3특(전북·제주·강원)에 대한 특례 확대와 대규모 국가 투자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동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국가균형발전의 결정적 골든타임”이라며 “전북을 포함한 3특 지역이 5극 체제 논의에서 또다시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정동영·안호영·이성운·박희승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전북의 위상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 통합특별시 중심의 5극 체제가 자칫 전북을 비롯한 3특 지역의 상대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북은 5극에 밀리는 3특이 아니라, 오히려 5극보다 더 강력한 지위와 특례를 보장받아야 할 지역”이라며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5극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전북을 포함한 3특 지역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의 실질적인 국가 투자와 이에 상응하는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를 “전북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이 처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14개 시·군으로 분절된 행정 구조 △취약한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농생명 산업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 △새만금·전주·익산으로 이어지는 성장축의 미완성 등을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꼽았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5극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이 국가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탄소중립 도시 조성은 물론 반도체·AI·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실증지구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패키지 특례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5극 법안만 먼저 통과될 경우 전북은 다시 주변부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확실히 강화하고, 3특 지역에 대한 특례와 투자 규모를 최소한 5극 이상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 국회의원들은 △3특 지역에 최소 10조원 규모의 국가 투자 보장 △수소·재생에너지·탄소중립·반도체·AI 등 미래산업 패키지 특례 부여 △스마트농업·중자·육종·축산·푸드테크 등 농생명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중앙 권한 대폭 이양 △광역 교통망·의료·청년정책 등 정주 인프라의 5극 이상 수준 강화 △자치조 직권·재정권·규제 권한에 대한 전면적 특례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닌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 “광역 통합 가속화되면 전북 소외 현실화”

김관영 도지사, 김민석 총리 만나 완주전주 통합·3특 균등지원 등 3대 현안 지원 요청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충청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특 국가균형성장 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5극 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 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넜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충청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한 뒤 김 총리에게 도정 주요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투자유치 불리 △SOC 소외 △기업·인

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의 목소

## “익산·군산·김제·부안 통합 중추거점도시로”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 시장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익산·군산·김제·부안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중추 거점도시 통합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심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는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방선거인 민선 10기에서는 반드시 단일 행정구역 통합시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익산·군산·김제·부안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가 대도시권 중심의 초광역 통합에 치우쳐 기초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도시가 살아야 진정한 5극 3특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 ‘익산시장 출마’ 심보균 전 차관

이어 “익산·군산·김제·부안이 주도하는 자율적 통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전북 서부권의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예정자는 통합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며 세 가지 핵심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첫째는 군산항, 익산역 KTX, 새만금 신공항을 연계한 육·해·공 삼각 물류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전북 서부권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기초지자체 통합임에도 광역 통합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메가시티 수준의 특별교부세와 재정 인센티브가 필요



하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자체를 특별 우선 배치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익산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는 익산역과 국가시제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RE100

선도 산업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통합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내놓았다.

심 예정자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익산·군산·김제·부안 시장 군수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 협약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당선 직후에는 지자체장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 기존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연내 통합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는 행정 통합 이전 단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우선 구성해 공동 이해관계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먼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이후 최소 10년간 각 지역의 예산 총액을 보존하는 원칙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기자·익산=이재춘 기자

## 전주 가정법원 신설 가시화

우범기 시장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전주에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을 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전북도민들의 가사·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었다.

우 시장은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과 청소년을 둘러싼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 환경을 마련해 전북 전체의 사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 시장은 “전주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안이 국회 분회를 최종 통과하고, 전주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국토교통 새싹기업 지원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CES 2026’ 참가 새싹기업과 간담회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4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어 소규모 중소·새싹기업들의 요구가 기술과제로 선정되기 어렵고 실증·인증을 위한 평가도 기술력이 나 잠재적 사업성보다는 과거 매출이나 재무 상황 등을 우선시하는 등 중소·새싹기업의 기술 인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교통분야 새싹기업들을 위한 발주처 설명회(4~11월), 전시회 개최(6월)를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혁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 6월 7.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 “이 대통령에게 배운 행정 실천”



성준후 전 청와대 행정관  
임실군수 출마 공식화

년 원칙이 있었다. 빛더미의 삼남 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되고, 실력과 합의의 정치로 모든 경기도민이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배웠다”며 “정치 행정의 경험을 임실을 위해 쏟아부었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 전 행정관은 이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 노력에 합당한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지켜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건설 등 5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또 △관공객 ‘천만 시대’를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으로 임실의 딱거리와 일자리 △육성호, 삼진강, 산밭을 임실의 미래 자산으로 키워겠다는 약속도 강조했다.

성 전 행정관은 임실풍중, 임실고를 나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임실=진홍영기자